

제433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보건복지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1

가. 보건복지부 소관

(14시56분 개의)

○소위원장 서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로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보건복지부 소관

○소위원장 서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위 심사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증감액 논의 이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종료 이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순서는 보건복지부제1차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관님 외에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소관 2개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급여일수 상한 초과자 전수조사를 통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급자 증가분만 추경에 반영하고 단가 인상분 107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2025년도 미지급금 정산에 따른 순수 부족분 22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2페이지, 총 4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3페이지,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증액이나 감액 의견 없이 1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장님, 단가 부분을 좀 낮춰서 감액하자는 의견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 말씀드립니다. 현재 단가가 편성 당시에 과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최근의 단가를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미지급금 2245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 말씀드립니다.

부대의견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통합할 수 있으면 취지를 다 담아서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긴급복지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여기 수정 이유에 표시된 대로 단가요인별 기여분 자료·급여일수 초과 수급자 및 진료비 규모·상한 초과자에 대한 선택병의원 지정 등 사후 조치 적용 인원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급여일수 상한 초과자 전수조사를 통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최대 4.2% 추가 상향했는데 단가 인상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 증가분만 추경에 반영하고 단가 인상분 107억을 감액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경택 복지정책관 배경택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상반기까지의 진료비를 가지고 작년 1년에 그 2배만큼의 진료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의 진료비를 다시 계산해 보다 보니깐 그게 4.5%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요청을 드린 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가 증액 107억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여일수 상한 초과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했고. 다만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365일 이상 외래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30%로 인상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금년에는 감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했더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왜 그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경택 본예산 편성에는 작년 1년의 전체 의료비 이용량을 저

회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예산은 저희가 보통……

○**김미애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때 그래도 과거 것을, 작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해서 해마다 어느 정도 증가한다는 비율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할 텐데 그걸 예측을 전혀 못 했던 말입니까?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경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통 전 3년간의 의료이용량들을 가지고 미래에 그 증가율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보니까 건강보험에서 여러 가지 단가 인상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의료급여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런 부분들 그거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수급자들이 하반기에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출 요인이 증가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만큼 그렇게 증가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경택** 올해는 아마 저희가 추계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작년 연말까지의 실추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시차라는 것들이 지금 추경인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 보통의 경우에는 편성하는 데 1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는데 추경은 작년 연말까지기 때문에 그 시차가 줄어들어서 아마 상당 부분 그 갭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운 위원님.

○**김운 위원** 의료급여가 과다 이용이나 의료비 증가가 주로 논의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건강상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결과 의료비가 늘어나고 그 결과 여러 의료기관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근본적인 원인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20년 넘게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런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의료급여 진료비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여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이제는 마련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급여가 많이 는다 이런 투입 예산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 개선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가 그게 저희의 성과목표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는 단순히 투입량 증가가 아니라 어떤 식의 지원이 이분들의 건강을 더 좋게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 위원**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4차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계획상은 27년부터니까 올해에 마무리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 위원** 연구 진행되는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고 계획을 진행하면서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참고로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전체 심사를 하고 나서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김미애 위원** 하나만 더, 차관께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김선민 의원 2245억 이렇게 증액을 수용하잖아요. 복지부가 오늘 또 증액을 다 받아들이는 걸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반영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되는 것, 이번 추경의 성격에 맞는 것만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한다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무턱대고 의원들이 요구하면 다 받아주고 그래서 하나도 관철 못 시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부합하는 것만 하시라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여기 미지급금은 저희도 이번에 추경할 때 요청드렸던 사안이라 수용 입장 말씀드렸고요. 수용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가서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26.2조 원인데 이걸 또 늘리겠다고? 가능할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여기 사실 미지급금……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것만 하시라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미지급금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미 지출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차관님, 이번 추경을 통해서, 미지급금 이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면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그동안 위원들이 지적했던 미지급금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 책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도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수진 위원** 제가 예결위 위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기재부나 예결위에서 관철을 시키도록 저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해결을 못 했던, 수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지를 한번 추경 때 보여 줘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감사합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서영석** 이제 부대의견 관련해서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이따가 검토를 하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의료급여 부대의견은 정리가 된 걸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배경택** 위원장님, 복지정책관 보고드리면, 위원님들이 오전에 주셨던 서면의견들을 반영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서면의견을 주셨던 네 분 위원님들 보좌진들하고 논의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를 드릴……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부대의견을 다 수용하시는 건가요?

○**이수진 위원**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면 이따 마지막에 정리할 건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마지막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정보 다 주신 다음에 반영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리를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소위원장 서영석**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1억 4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12억 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이 예산에 대해서는 300개,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부안 유지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고요. 더불어 저희가 이것 추경을 낼 때 기초단위에 있는 센터에 인력을 반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요청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요 여기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 입장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차관님, 오늘 전체회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보면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니 육칠팔십대 어르신들께서 주로 이용하고 계시고 또 이분들의 접근성,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이 확대해야 아마 접근하기가 용이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데보다도 다른 데, 각 시군구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깐 아마도 더, 시군구에서 장소 같은 것들 정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좀 여유 있는 분들 계신 동네에다가 그걸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식사라도 제대로 하실 수 없고 경로당도 못 가시고 복지관도 못 가시고 굉장히 어려울 때 특히나 지금 같이 어렵고 힘들 때, 저희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이나 노인자살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연령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의, 특히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역사회에서 보면 자원봉사 겸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되면 이분들이 지원을 조금 줄이게 되더라고요, 정부 지원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시군구마다 사실 많이 펼쳐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액 요청을 냈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는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먹는 문제, 그러니까 약간 필수품의 문제는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하는 건데요.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잘 모색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중에서 사각지대 발굴이 서비스 연계로 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조정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증액과, 정부 원안에다가 플러스 증액을 해 주시면 인력도 보강해서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력이 보강되면 그분들이 시군구에 하나씩 들어가게 될 경우에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든 아니면 관련 단체든 이런 데랑 연계해서 발굴을 더 해내는 데 아무래도 역할을 하실 수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없어서 상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자원봉사도 하고 노인일자리도 하고 자활도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전담 인력이 있기를 좀 바라고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오전에도 존경하는 서명옥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국비 50% 매칭 구조인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또 재정부담이 되고, 오히려 제가 가만 보니까 재정자립도 낮은 곳에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게다가 이것은 이미 유사한 먹거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 중복과 행정낭비의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성과평가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덮어두고, 제가 볼 때 그냥 퍼드립 같아요. 본인들 돈이라면 이렇게 절대 사업 운영 안 할 겁니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하는 게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가 할 일이지요.

얼마 전에 울주군에 미취학아동 3명 포함해서 자녀 넷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아빠가 있어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유가·고환율로 인해서 당장 어려워지는 계층이, 중산층에서 더 떨어지는 계층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지 이렇게 있는 돈으로 퍼 주는 거 누가 못 합니까? 하려면 더 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은 아니에요. 평가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늘립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미애 위원** 하세요.

○**소위원장 서영석** 예,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 여기 아까 성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본사업이 5월 1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4월 말에 중간보고를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수진 위원님에 대한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곳은 재조정해 가면서 이 취지에 맞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임실 사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되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김미애 위원** 이번 추경에 그런 거 들어온 거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긴급복지가 추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은 긴급복지 외에 다른 조치들이 조금 필요해서요 긴급돌봄, 일상돌봄, 긴급복지 이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마저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복지는 주어진다면 다시 거둬들이기 힘든 거 아니잖아요.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로 저는 무겁게 책임감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현장 지자체에서 요구사항이 있나요, 더 추가해 달라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장님, 이게 이쪽 시군은 하는데 옆의 시군이 안 하면 옆의 시군에 계신 분들이 이쪽 시군에 오기도 하고 또 왜 우리는 그런 게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곳도 있고 해서요. 사실 229개 시군구에 다 하고 그다음에 푸드마켓 이렇게 포함해서 하면 300개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제가…… 답변을 한번 차관님이 해 보십시오.

어쨌든 물품으로 선 지원하고 이후에 1차 지원하고 2차 연계를 하고 3차까지 지나가서 그분들이 다시 재활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을 만들어 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단순 물품을 넘어서서 결국은 복지까지 연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위기가정을 구출해 내고 그걸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재활하거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계하는 건데 이게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사실은 이게 전국 시행이 아닌데도 상당까지 연계 간 계한 1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 이용자는 7만인데 한 7000명 정도는 상당으로 갖고 한 1000명 정도는 진짜 우리가 발굴하지 못했던 연계까지 다 하고 있고요. 연계를 기다리는 분이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 산업이 아닌데도 이 정도 사각지대 발굴은 사실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픈런이 있고 불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숙 위원** 그거는 어떤 복지든 간에 누수라고 하는 건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본사업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안 맞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감안할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7만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거기에 실제 복지서비스까지 제공했던 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증액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장 개수를 늘려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계속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전담인력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 업무가 굉장히 과다해지고 거기에서 불만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 업무를 지금 푸드뱅크·마켓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업무를 또 지원하는 업무가 제대로 작동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전국에 이걸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만큼 확대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 또한 반드시 증가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간 후원이 현재까지 100억 원 정도 이상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기본선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의 자원은 민관 협업을 통해서 더욱더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또 한편에서 더 많이 노력해서 확보해야 될 노력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의 특징은 민간 협력을 한다는 거고요 지금도 110억 정도 저희가 후원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이 사업에 이르면 지금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일정 정도 재원을 후원하고 있는, 기부하고 있는 단체의 개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민간 후원에 대해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일부 사업체는 세계적인 호황을 맞아서 잘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노력하신다는 게 말은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필요한 국민들이 있다는 것도 동의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수집해서서 필요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까지는 다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정부가 기업 후원 없이도 할 수 있는 규모로 안정적으로 꾸려 가실 생각을 해야지, 이러다가 만약에 우리나라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적어도 책임질 수 있는 규모로 운영을 하시든가 책임질 수 없고 민간에 이걸 요청하려면 부탁하는 형태로 해서 뭔가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해야 기여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확대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면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게 지금 어떤 걸 제공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정부의 재정으로 하는 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민간기업에서 후원처를 찾지 못하거나 관심 있는 데들은 저희들이 그냥드림으로 연결을 해 드린다는 거고요.

민간의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트랙으로, 예를 들어 기업들도 요즘 ESG 성장 얘기하면서 사회공헌활동에, 사회 기여에 관심이 많습니다. 본인들의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기여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걸 따르도록 하면서……

○**이주영 위원** 이 그냥드림은 그런 형태는 아니기는 하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를 들면, 그런데 한국청과 같은 경우에는—물론 돈을 냅니다만—청과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기울였던 거고, 기업의 이해와 비즈니스모델과 맞게 하도록 하고 ESG 성장 때문에 저희들이 지표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별도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 지표들이 기업들이 흔쾌히 참여하고 또 그 참여하는 기업 자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제 혜택을 포함해서 적어도 국가에서 기업이 이 정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든가,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나오고 있는 방향성이 의료계에도 쥐야 될 돈을 계속 안 주는 형태면서 국가가 늘리겠다는 복지는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가요.

그런데 의료계에 쥐야 될 돈들이라든지 의료급여 마찬가지로 백신 마찬가지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국가가 책임 있게 돈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외로 사실상 ‘민간이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정부는 돈을 안 주거나 늦게 주고. 아니면 ‘협조를 구했다, 너희에게도 도움이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나쁘게 말하면 뭔지 아실 건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위원님.

○이주영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가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복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책임 있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기업들에게 적어도 부담으로 비쳐지지 않게 정부 차원에서 통일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김미애 위원 아니, 하나만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3월 25일 기준으로 보니까 7만 3771명에게 지원했는데 실제 취약계층에 해당해서 2회 차 이상 방문한 이용자는 통계상 전체 22.5%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그건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이걸 꼭 나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다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먹거리마저 부족할 정도에 해당되는 분이 73%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도덕적해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갑자기 소득이 떨어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냥드림이라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저소득계층을 발굴하는 의미는, 저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데 집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저소득계층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에게 의미를 갖기 위해서 처음에 출발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설계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이제는 그냥 마구 다 확대하는 걸로 가는 게 맞지 않다는 취지예요. 각 사업마다 당초에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에 부합되게 지속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냥 막 확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꼭 필요한 사람

들이, 장소도 그런 곳에 정하고 만약에 서비스 연계율이 너무 낮다 이런 곳들은 저희가 재조정, 장소도 없앤다든지 이렇게 재조정을 할 거고요.

이거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연구용역도 말씀드린 대로 4월 말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모델을 만들어서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서영석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 차관님, 저도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그냥드림 사업 목적이 뭐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필수적인 생필품이 필요한 분께 지원하고 그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서명옥 위원 사각지대 발굴해서 위기가정 없도록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지난달에 보시면 30대 가정이 어린아이 5명을 데리고 같이 떠난 정말 안타까운 사연 보셨지요? 저는 정말 복지는 선택과 집중이어야 되고요. 위기가정 발굴하는 건 발로 뛰고 머리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복지직 중에서도 이런 업무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냥드림 사업은 보면 그냥 쉽게 장치를 해 놓으면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저는 정말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져가는 사람 실적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실적이 많아지면 아주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포장될 수 있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복지정책을 전담하는 복지부에서는 이런 사업 이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복지는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고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가정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머리 아프게 발로 뛰면서 이런 위기가정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는 게 저는 복지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그냥 모두 다 드림이어서 가져가도록 하는 거, 이건 정말 저는 쉬운 사업이라고……. 이건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적 늘어 가지고 7만 명, 10만 명, 20만 명 늘어나는 거, 이건 도덕적해이 애다가 정말 문제가 많고요.

조금 전에 차관님이 4월 말에 여기에 대한 분석 결과 나오신다고 그랬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중간보고를 받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 모형을 잘 설계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렇다면 이용자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복 이용자라든지 동일 이용인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렇지요? 그리고 이용한 사람들이 다른 복지기관하고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면밀하게 분석한 이후에 이 사업을 다음에 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 이 사업 우리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세금 무지무지 많이 냅니다. 그렇지만 제가 낸 세금이 정말 반듯하게 쓰여진다면 저는 얼마든지 세금 더 낼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퍼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말에 이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다음에, 어차피 지

방선거 끝나면 다시 추경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때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저희는 지금 일부 지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이 있어서 전국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명옥 위원** 차관님, 자꾸 그렇게 말을 쉽게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주민들은요 ‘옆 동네에서 이런 사업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엔 이게 없어?’ 그러면 당연히 해 달라고 합니다. 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막 해 주는 게 정책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고민을 하시고요. 정말 이 사업이 그 지역에 맞는지 현황 분석한 이후에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책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행정적이고 복지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해 달라 그런다고 해 주는 게 정책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 정도만 하세요.

○**서명옥 위원** 정책을 하시는 데 고민을 하고 잘하시라고요.

○**소위원장 서영석** 고민해서 잘하신다잖아요.

○**김미애 위원** 고민 안 해서 왔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지.

○**서명옥 위원** 안 하니까 그렇지요. 지금 데이터도 안 나왔는데……

○**소위원장 서영석** 어쨌든 이게 경제 환경도 그렇고 물가상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폭넓게……

어쨌든 전체로 확대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정부의 입장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지요. 문제 제기하신 걸로……

○**김미애 위원** 안 넘어가면 어쩔 것이여.

○**이수진 위원** 넘어가세요. 충분하게 말씀 들으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서영석** 충분하게 들은 걸로 하시고.

다음 보고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12억 6000 수용하는 것으로?

○**김미애 위원** 이것 증액은 안 돼요. 이것 증액은 하지 말고 정부안대로 그냥 가요. 무슨 증액까지 합니까? 정부안대로 그냥 해요.

○**서명옥 위원** 정부안도 많이 양보합니다.

○**전진숙 위원** 아니, 증액을 하자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서명옥 위원** 아니요. 정부안대로 가시고요.

○**김미애 위원** 어차피 이것 가지고도 되지도 않을 건데……

○**전진숙 위원** 증액을 하자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요.

- 이수진 위원 일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 김미애 위원 아니, 사람 없이 한다고 한 거잖아요, 시범사업 때.
- 전진숙 위원 그건 김미애 위원님 의견이고 지금 증액을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는 건데……
- 소위원장 서영석 어떻습니까?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장님, 5쪽에 증액이 12억 6000……
- 소위원장 서영석 12억 6000.
-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이것은 사실 저희가 늘리려고 하는 게 기초가 300개입니다. 거기에 1명씩 넣는 예산입니다, 300명. 당초에도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던 사항이어서요 이것은 저희가 증액을 수용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 김미애 위원 아니, 당초에 이렇게 안 한 것을 추가로 추경을 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저희가 한 번 해 보니까……
- 김미애 위원 내년 본예산 때 제대로 설계해서 그때 하시는 게 맞아요.
- 전진숙 위원 추가로 하니까 추경이지요.
- 김미애 위원 그게 무슨 추경이에요? 국가재정법을 보세요.
- 서명옥 위원 앓아 보세요. 추경에 안 맞습니다.
- 전진숙 위원 추가로 하니까. 긴급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건데……
- 서명옥 위원 긴급사항은 아니지요.
- 김미애 위원 이걸 긴급 아니에요.
- 서명옥 위원 아니에요. 그리고 더 잘하시려면 사업 구성한 이후에 하세요.
- 김미애 위원 긴급복지 이런 것은……
- 이수진 위원 이것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따가 뻔지 말지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 소위원장 서영석 부대의견 정리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입니다.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그다음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서 청년미래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자는 3억 5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2개소 설치에 필요한 2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위기청년 지원 인프라 구축인데요 여기에 정책센터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14억 6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증액 제기안은 지금 서울과 경기도 저희가 1개씩만 되어

있는데 추가로 1개씩이 필요하다는 증액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상 가족돌봄 그다음에 고립·은둔 나눠져 있지만 그냥 경기 하나, 서울 하나 추가하는 거라 저희는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8쪽에 청년정책지원센터 인건비가 현재 3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제기안이 14억이라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액 정도 수정 수용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의견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동의합니다.

○김미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추경이, 국가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아니잖아요. 이것을 계속 늘리면 되지요. 그런데 국가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본예산에 전부 반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이 전쟁추경이라면서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김미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다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런데 위원님……

○김미애 위원 복지부가 왜 책임감 있게 일을 안 해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김미애 위원 제89조 1항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것 말씀하세요. 이게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 어디에 해당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특히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이나 고립·은둔 청년의 생활들도 어려워지고 이분들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는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것은 핀셋 지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핀셋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다른 것으로 지금 추경에 정부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청년미래센터가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주된 게 상담 같은 건데 지금 있는 걸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발굴인데 발굴이 갑자기 쉬워집니까, 중동전쟁으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그래서 이게 발굴이 되게 중요한데 서울하고 경기는 지금 1개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포괄하는 범위가 넓으니까 여기를 1개씩 더 늘리는 예산이면……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족하다는 근거는 뭐예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아니, 위원님, 그것은 인구밀도하고 저희가 실태조사한 것 보면 서울하고 경기가 많기는 하거든요.

○김미애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늘려야 돼요.

○이수진 위원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위원님.

○이수진 위원 그래서 사실 이걸 처음 계획하실 때 인구라든지 기타 청년들이 밀집돼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제도를 만들거나 정부에서 뭔가 새롭게 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최소한으로만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 거지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북부와 남부는 서울 통과해서 가야 되고 아니면 외곽 타고 짝 돌아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제작년 광주광역시라든지 기타 은둔·고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시설, 센터 그런 데를 다 벤치마킹해 봤는데 이게 사실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지원해야 돼요. 우리가 오죽하면 영케어러,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롭게 촘촘하게 집어넣기 시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이슈와 관심이 있을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소외되는 게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고립돼 있고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잘하는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알아서들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워하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면 정부가 제대로 지원해 달라 상당히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더 힘든 거예요. 관심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더 발굴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과 경기 쪽에 하나씩 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청년 인구에 대비해서는 그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정부의 책임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저희가 법도 만들고 얘기는 했지만 전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리하시지요.

○김미애 위원 아니, 저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할 성격이라는 거예요. 국가재정법 제89조를 보세요. 제가 기획예산처장관께 말씀드렸더니 인력 같은 것은 절대 안 된다 원칙이었습니다. 그게 왜냐?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의 기준을 보세요. 국가재정은 마음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할 것, 추경에 편성할 것 이렇게 있는데 추경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만들면 돼요.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많이 만들면 좋은 것 누가 모릅니까? 다 퍼주면, 남한테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좋은 것을 계속해주면 좋은데,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거기에서 필요 불급한,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무겁게 정하는 게 역할입니다. 당연히 다 하면 좋아하지요.

이게 그래서 제89조 1항의 추경 요건 어디에 해당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건 아까……

○김미애 위원 차관님, 어디에 해당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아까 드린 대로 저희는……

○김미애 위원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의 몇 호에 해당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나 문제 때문에 이 친구들 지원도 시급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리고 서울·경기는 청년들이 많으니 발굴 차원에서도 필요하

다.
○**김미애 위원** 그건 항상 필요해요. 갑자기 중동전쟁으로 특별하게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근거가? 지금 나와 있는 거라도 있고 뭔가 그걸 가지고라도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입양 부모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것까지, 정부는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그거야말로 아무도 목소리 못 내잖아요. 무슨 아가들이 목소리를 냈니까, 울음으로밖에 표현 못 하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하냐고요. 국가재정법을 적용해야 안 됩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김미애 위원** 아니, 그것 말씀 못 하시면서 마구 이렇게 저렇게 이현령비현령으로 갖다 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수진 위원** 이견이 있으면 넘어가시지요. 서로 이견이 있으면 좀 넘어가시고 다음에……

○**김미애 위원** 넘어가?

○**이수진 위원** 어떡해요. 넘어가야지 뭐.

○**소위원장 서영석** 정리하시지요.

이게 가족돌봄청년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건 뭐 추경으로서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거니까 그걸 갖고 쟁점이 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 보면 3억 5000은 필요하다. 서울·경기도 하나는 필요하다는 거고 그 밑엿것은 뭐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같은 겁니다, 위원장님. 이게 청년미래센터가 예산편성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서요 2개를 늘리려면 둘 다 가족돌봄청년하고 고립·은둔 청년 각각 이렇게 예산을 넣어 줘야 2개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이 열심히 주장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김미애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건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지요.

○**김미애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너무 무책임한 거지요.

○**서명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짧게 할게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서영석** 예.

○**서명옥 위원** 차관님, 그러면 지난해 여기서 말한 가족돌봄사업하고 고립·은둔 사업이 있지요? 실행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이걸 법이 올해 시행돼 가지고요. 올해 4개가 원래 예산이, 4개 센터는 원래 있었는데 숫자를 말씀드리면……

○**서명옥 위원** 아니요, 가족돌봄하고요 고립·은둔 사업 실행행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부 기준 집행률은 99.4%고요. 실집행률은 78.8%입니다.

○서명옥 위원 아니요, 24년도는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 2024년도는 정부 기준 집행률은 98.6%, 실집행률은 67.9%.

○서명옥 위원 제가 자료받은 바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소위원회 끝나고 그 집행률하고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자료 좀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리고 청년미래센터 구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펀드 사업이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 그렇습니다.

○서명옥 위원 매칭펀드 사업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지자체랑 협의합니다, 위원님.

○서명옥 위원 ‘합니다’가 아니고 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이것은 했습니다.

○서명옥 위원 했다는 근거 있나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 지난……

○서명옥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 지난 3월 24일에 인구아동정책관인 제가 주재해서 17개 시도 관계관과 회의를 했습니다.

○서명옥 위원 회의를 했지 결과는 안 받아 보셨잖아요. 거기서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요? ‘S’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 그때 저희가……

○서명옥 위원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서명옥 위원 그러면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 그렇지 않고……

○서명옥 위원 그러면 회의했던 회의 자료하고요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의견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 예, 일단 회의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서명옥 위원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로 지방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여력이 있냐 이거지요. 여력이 없어 가지고 청년센터 제 때 개소 못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여기는 저희가 지자체에 보니까 정부예산이 늦어지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센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시도가 많았고요. 다만 일부 지자체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 그렇게 얘기해서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서명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꾸 회의가 늦어지니까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소위원장 서영석 관련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8페이지의 14억, 이것은 50%만 반영하면 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저희는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이수진 위원 차관님, 그리고 참고하세요. 제가 서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 저도 확인을 해 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관심 있어 합니다.

○이수진 위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가족돌봄청년하고 고립·은둔은 원안 증액하는 걸로 하고 위기청년 지원 인프라 구축은 50%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신규 청년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2억 8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추경 목적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3억 8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3억 8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15억 2100만 원 감액 의견,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도 36억 5400만 원 감액 의견, 자립지원전담기관 보조인력 지원에 대해서도 6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장님, 저희는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좀 어려운 입장 말씀드리고요. 교육비로 2억 8000만 원 증액 제기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차관님, 노인 그다음에 학대피해노인, 정신, 연장돌봄, 자립지원 이렇게 4개 분야의 인력 지원인데 8개월 동안 인력 지원 맞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여기가 경기 위기와 다 관련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5개 기관이고요.

○김미애 위원 아, 5개. 경기 위기와 관련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요즘에 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실 일자리 많이 줄었고 취업……

○김미애 위원 아니, 그 일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

해노인전용쉼터, 정신요양시설, 연장돌봄……

저는 연장돌봄은 관련 있을 것 같다고 인정해요. 왜냐하면 급격히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에 따라서 새로운 일, 투잡·스리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돌봄을 연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이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경기와 연관성을 제가 찾기 어려워요, 당초부터 있는 구조적인 문제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이것은 일자리에 참여하는 청년 입장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것은 다른 정책으로 하는 게 맞지요. 그 청년일자리 만들어 준다고 이걸 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복지부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런데 위원님, 여기도 행정부담 때문에 사람 손이 필요한데고 일자리 없어서 쉬고 있는 청년한테 일 경험 주는 게 꼭 맞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미애 위원 정말 청년을 참 함부로 대합니다. 8개월 그 일자리 줘 가지고, 아까 누구도 그런 질의를 하던데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청년을 그렇게 뺨질식으로 이 일자리를 줘서 그분들에게 전문성을 쌓아 줍니까? 뭘 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래서 이것은 사실 후속 일자리까지 이어지도록 고용부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위원님.

○김미애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인력 증원하고 지원하는 것, 추경에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기획예산처랑 다 논의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이건 정부 예산안이기 때문에 기획처랑 한 겁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정부도 정말 이랬다저랬다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아무거나 갖다대네. 청년을 8개월 딱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복지부 예산이라고 하고……

○김윤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영석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코로나가 우리가 최근에 겪은 가장 큰 일종의 재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때 다른 선진국들의 방역 목표에는 들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방역 목표에 들어 있지 않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차관님 뭔지 맞춰 보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송구합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윤 위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목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이전에 요양보호사 돌봄받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집에 못 오니까 방치되어 있고 취약계층들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지고 고립되어 있으니까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물론 이번 중동전쟁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되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쟁 국면에서 취약계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될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사회경제적 위기가 취약계층의 숫자를 늘리고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렇습니다.

○**김윤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의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제89조 1항의 3호에 보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항이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김윤 위원** 좀 아쉬운 것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얼마나 늘어나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재정과 서비스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복지부가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오늘 김미애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질문에 복지부가 조금 더 적절한 답변을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차관님, 이걸 예산이라서 하나하나 짚어야 되는 건 아는데 하나하나 뭘 짚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부터 지금 정부에서 뭐 하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 보면 전부 다 더 퍼 주겠다는 건 수용이고요. 이건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건 다 수용 거부예요. 이것을 제대로 내용을 보고 하신 건지 당을 보고 하신 건지 진짜 모르겠을 정도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요.

청년 관련해서 이게 참 복지가 어렵다고 제가 느꼈던 게 해 주자는 말 듣기 참 좋고 하면 좋은 사람 되는 것 같고. 이것 무리하지 않냐, 이게 지속가능하냐 하면 마치 어려운 사람한테 뭐 주지 말자는 사람처럼 돼서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분위기를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도 이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걱정한다면 이 청년들이 이 일자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우리나라 복지 전문가로 거듭나고 양성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우리가 비전문가들 혹은 경력 없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땀질식 일자리에, 그것도 단기 채용하는 데 드는 돈이 도대체 얼마냐고 여쭙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어떤 것도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복지는 전문 영역 아닙니까? 행정은 전문 영역 아니에요? 국민들 민원 상담은 그냥 아무나 해도 되는 일입니까?

이것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전단지 나눠 줘라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 숫자나 세라, 딱 그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교육 잠깐 시키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 계신 분들, 공무원분들 그런 생각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다 본인이 소신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고 본인이 이루고 싶은, 그래서 성과를 내고 싶은 부분이 있는 분들인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나 데려다가 대충 교육시켜서 땀질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일자리는 굉장히 하찮은 일자리가 되는 거고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 사기 다 떨어지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구실은 좋지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이것 전부 보면 그냥 온 국민을 취약계층으로 만드는 것 같

아요. 이것은 방향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경험해 보게 만드는 게, 이게 무슨 키자니아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해 나가고 거기서 성취를 얻고 내가 뭔가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지금의 20대들이지 대충 일해도 정부가 적당한 돈을 줄 거야라는 데 중독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 수많은 정책들 하나하나 다 쪼개 놓고 이름별로 다 다른…… 그냥 대상을 통합하셔가지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직업에 있어서든 통합하셔서 비슷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 재정이 진짜 어려워지고 세수가 확 떨어졌을 때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정책을 내셔야지 어디 한쪽에서 이야기하면 새로운 사업 하나 꺼내서 거기에 재정 몰아주고…… 이것 몇 년이나 가능한 재정일 것 같으세요?

예산소위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심지어 전체 회의 정회 중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추경이어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복지위는 이 정도나 되지 지금 농어촌특별회계는 700억이라면서요.

제가 그냥 대놓고 여쭙볼게요. 지금 돈이 남아 남니까? 진짜로 걱정이 돼요, 이렇게 퍼주다가 나중에 ‘안 됩니다’ 했을 때 누가 이걸 뒤집어쓸 건지. 여기 계신 분들 책임 안 지실 것 같으세요? 이 정부 끝나면 끝납니까? 너무 과해요. 민주당에서 이것 필요하다고 그러면 돈 다 주실 거예요? 어디서 건으실 건데요? 올해 잠깐 반도체 반짝해서 세수 좀 늘어나면 빚부터 갚으셔야 되고 함부로 사업 늘릴 게 아니라 지속할 사업과 그만둘 사업과 제대로 인프라 구축할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퍼 주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주지 말자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청년들이 제대로 된 기업에서, 제대로 된 사업체에서 혹은 개인사업자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중간중간에 놔 주셔야지 우리가 픽한 몇 명에게만 돈을 몰아줘서 몇 명에게 8개월 일자리 주겠다. 도대체 이 재정으로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대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전부 다 수용 곤란입니다. 민주당이 더 주자는 건 다 수용이 가능하대요.

○이수진 위원 차관님,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소위원장 서영석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복지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정부예산이 기업들, 산자위나 이런 데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전략산업 이런 기업들을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미래 10년, 20년 먹거리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지금 몇십억 갖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수십조 수백조까지, 세액공제는 물론이거니와 기타 정부 공공기관들이 연구·개발해서 그런 것 다 무료로 퍼 줍니다.

저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복지예산이 시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렇게 찢어받기는 게, 저는 그게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건의료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 인식들이 뭔가 개발하고 만들어 내고 미래먹거리가 되고 이래야지만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잘못됐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준비하는 것들, 아무리 잘 준비하면 뭐 합니까? 기획예산처 가면 다 깎이고 날아가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예산으로 치부되는 게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찾아봤어요. 이분들의 인건비는 월 240만 원을 지원하고 이게 4대 보험을 또 포함합니다. 그리고 8개월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게 인턴이에요. 이 인턴을 통해서 결국은 5개 사회복지시설에 이분들이 투입되는데 교육 없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더니 현장 투입 전에 사전교육이 있습니다. E러닝 교육, 집합교육을 병행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제도와 사업을 이해하고 노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에 대한 이해, 노인 그다음에 시설별 주요 업무프로세스, 청년 인력의 어떤 복무 관리, 기초 회계, 예산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여기가 수행 기관이네요—교육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청년인턴 일자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바로 그 한 사람당 역할을 다 제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인턴십을 통해서, 사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훌륭한 인재로서 자라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험을 원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줘야지요. 그런데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다 잘리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또 240만 원이 그렇게 많은 월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턴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실제로 불확실한 미래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걸 예산을 깎아서 이런 경험을 못 갖게 하는 것 자체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업무 해태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이게 66억 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각 시설이 특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혹여라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 시설의 특징에 맞는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우선 하나 확인하면 이 기관들의 요구가 충분히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이쪽 기관들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김예지 위원님.

○김예지 위원 제가 부대의견을 신지 못해서……

차관님, 저희가 보니까, 저는 깎자거나 주지 말자는 얘기를 드릴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큰 돈은 아닌데 작은 돈은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자립지원이나 이런 거 보면, 야간 순회 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인력이 사실 공고를 내도 안 와요. 그런데 그거랑 지금 이 급여랑, 인턴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건 정규직인데.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걸 하자 안 하자 이게 아니라 여기 제 부대의견을 좀 실어 주셨으면, 인턴 사업하고서 사실 이 결과보고나 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물론 추정이니까 급한 거니까 우선 뿌리고 이렇게 끝내면 된다고는 생각하시지만 어쨌든 결과나 목표로 봤을 때는 이분들을 사회복지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잖아요.

차관님, 맞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이분들이 수행한 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여기 내용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담으신 거고 하실 예정인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청년들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건 절대 아니고요.

○김예지 위원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여기 되고 나서 사실은 돌봄이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 이런 친구들을 우선 채용해서 계속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 부분들은 평가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예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담아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관 평가도 필요하지만 사례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이게 어쨌든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선은.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님, 이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부대의견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주신다고 하셔서요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제가 그런데 이거를 제출을 못 했어요.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었는……

○김미애 위원 김예지 위원 것, 여기 있어요. 부대의견 있어요.

○이수진 위원 갖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서영석 있습니다, 있어.

○김예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평가 얘기가 없고.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립지원사업을 잘할 테니까, 본인들이 당사자성을 가지고 잘할 테니까 조금 특혜를 주셔야 약간 그런 말이었고.

이거는 평가를 좀 늘려 가지고, 지금 사실 이게 인턴 사업이긴 하지만 급여가 솔직히 적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자립생활센터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이 정도 받고 그냥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현장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래서 제 말은 이게 그렇게 작지 않은 돈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업무 평가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하셔서 그래서 연계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해 달라라는 의견을, 그래서 제가 못 담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평가 관련된 내용을 좀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예, 그렇게……

안상훈 위원님.

○**안상훈 위원** 되도록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적 책임성을 갖고 이 복지 문제를 짚으면 자칫 굉장히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 돼 버려 가지고 좀 가끔씩 답답하고 참담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감액 의견을 냈는데, 오전에도 짚었고 며칠 전 국장님 따로 와서 브리핑 해 주실 때도 제가 짚은 내용들을 지금 답변을 못 들었고 또 어떻게 챙겨지고 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비스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만성적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기 시에는 복지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수요도 늘어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만약 이게 확인이 되면 돈 써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다섯 가지 종류의 시설에, 제가 계속 듣기로는 일반적인 행정 쪽에는 자격이나 이런 거 아니라고 일반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하기로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행정하는 거는 특별한 자격은 없지만 사회복지사나 여기 정신요양시설은……

○**안상훈 위원** 제가 사회복지사거든요. 자격증이 있고 현장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시설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시설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컴퓨터라든지 그 시스템을 활용해 갖고 하는 거를 하려면 자격증 없이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냥 청소시키고 짐 배달시키고 이런 거에, 그런 것도 지금 청년 인턴 분야에 고려한다면 모르는데 제가 자격증 얘기하는 게, 제가 몸 담고 있던 사회복지계의 이기주의를 반영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대로 된 또 지금 그 정도, 정규직도 지금 그 정도 받고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차후 경력으로 관리가 되기 위해 서라도 저는 일반적인 행정 쪽이라도 만약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도 저는 자격증 있는 청년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이거는 채용 조건을 저희들이 할 때 어차피 지자체하고 선발 기관이 이 기관들이거든요. 할 때 조건을 조금……

○**안상훈 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걸 좀 받으시면 저는 이거 오케이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아직까지 못 들었거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합시다. 안상훈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실제로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허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정도 합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입니다. 입양 등에 있어서 중추 역할을 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14명의 추가 인력 확보가 있으므로 5억 3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24명에 대한

추가 인력이 있으므로 9억 2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김 위원님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권리보장원 저희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정 성격인 거 감안해서 사실은 김미애 위원님은 14명, 남인순 위원님은 24명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는 김미애 위원님이 제시한 증액 요건 14명, 5억 3700만 원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이수진 위원 이것은 충분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수용하지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김미애 위원, 어디 가셨어요? 이런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참……

○이수진 위원 오전에 충분히 이야기하셨으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김미애 위원님의 주장을 반영해서 5억 3700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유류비 증가한 점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21억 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의 유류비 상승 때문에 운영비를 월 20만 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센터에 2633개소에 지원하는 거라 저희가 정부안에는 반영이 없습니다만 이거는 수용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21억 원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동찬 15쪽입니다.

4번 노인정책관입니다.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등을 고려하여 460억 3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60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장님, 저희 증액안 2개 말씀 주셨는데요 605억 원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더 큰 금액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지난 국감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안이라서 특별한 의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를 잘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은호 장애인정책국 소관 3개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규 수요 대응을 위해 384억 8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역시 신규 수요 대응을 위해 99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7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의 경우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인력 증원을 위해 4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인천 색동원 거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15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384억 원 증액 제기, 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99억 2800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억 4800만 원 수용 입장이고요.

마지막에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산출 내역에 보시면 이게 480시간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게 추가 지원이라 이렇게 많이 하면 1일 24시간을 넘게 돼서, 이거를 24시간으로 맞추면 한 8억 7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억 7000만 원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영석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의견이 없고요.

제가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13페이지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가 당초에는 남인순 위원 안처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추경 성격에 맞추어서 정말 꼭 해야 되는 그것만, 정말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결연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거고. 남인순 위원 안은 사실상 이게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 입양기록물 관리,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24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면서 뭐 때문에, 다른 건 다 잘도 수용 수용하면서 이것은……

저는 진짜 엑기스로 뽑아서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된다 그 정도거든요. 다른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면 당연히 남인순 위원 안을 수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아까는 추경 성격에 맞지 않다고 하셔 가지고……

○김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추경 성격에 안 맞는 것 다 큰 걸로 받았잖아

요. 그러면 남인순 위원 안을 수용해야 맞지.

○이수진 위원 남인순 위원님 안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서영석 김미애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아보전이 새로운 사업을 맡고 나서 지금 전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진숙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던 사안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그래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김미애 위원 잘 아시잖아요, 입양기록물도 문제 있는 것.

저는 다른 것 다 안 하면 제 걸로 계속하는 게 맞는데 다른 것 전부 다 수용하는 마당에 여기 진짜 문제인 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 취지예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높은 것으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감사합니다.

장애국 소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5페이지, 김미애 위원님 안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12억 6000만 원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는 의견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이따 정리를 해 주시고 2차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차관님, 그건 꼭 반영되어야 돼요. 관철시켜 주세요.

○이수진 위원 복지부가 힘이 있어야 관철을 시키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예, 압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제2차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형훈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7번 한의약정책관입니다.

한의약산업육성입니다.

내역사업인 한의임상데이터 기반 근거창출 및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신규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용으로는 한의약 관련 임상연구, R&D, 기술개발 등을 수행할 국립한의보건의료 AI 연구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한의학의 안전성·유효성 기술개발을 통한 보건의료 발전과 근거 기반, 한의학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차관님, 이게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예요? 진짜 궁금해서 여쭙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추경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차관님, 한의학산업육성, 한의임상데이터 기반 근거창출 및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국립한의학보건의료 AI 연구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이게 지금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고 전쟁추경에 왜 들어왔습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았으나 그것을 놓친 상황에서 이 예산도 이번 추경 기회에……

○**이주영 위원** 그 놓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게 들어온 이유가 뭔지를 여쭙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학의 안전성·유효성 기술 발전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주영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김미애 위원** 한의사협회 회장께서 대통령 주치의여서 들어간 건 아닙니까?

○**이주영 위원** 차관님, 이게 전쟁추경이랑 관련이 있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차관님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전쟁추경이라고 약칭해서 부르고 있지만 어쨌든 민생……

○**이주영 위원** 민생 안정이랑 관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민생 안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요?

이건 수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추경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훨씬 더 정당성 있는 내용들 많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막으셨어야지요. 이 정도도 보건복지부에서 못 막으세요? 이건 명분이 없다, 이런 게 들어오면 추경 전체가 명분을 잃는다, 그 얘기 보건복지부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보건복지부한의학정책관 방석배** 한의학정책관 방석배입니다.

○**이주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한의학정책관 방석배** 그동안 한의계 쪽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든 계속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영 위원** 작년에 논의 있었던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이걸 추가경정이잖아요.

그리고 한의임상데이터 기반 근거창출, 지난번 국감 때도 계속 나왔어요, 지금 하나도 되고 있는 것 없다고.

○**소위원장 서영석** 이주영 위원님, 충분히 의견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 같고……

○**김미애 위원** 아니, 있어요.

차관님, 이것은 방금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의 추정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아요. 3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것 따지면 모든 것을 다 추정으로 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추정안에 편성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취지가, 모든 것이 부정당합니다. 그것을 왜 복지부가 가만 계세요? 이게 추정 요건에 맞아요,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소위원장 서영석** 복지부에 뭐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수진 위원님.

○**김미애 위원** 아니, 거기에 대답을 좀 들어 보고 해요.

○**이수진 위원** 소병훈 위원님이랑 저랑 한의약산업 육성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요.

차관님, 어쨌든 한의약의 공공데이터 확보가 중요하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렇게 공공데이터를 확보해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불확실한 상황에다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의료 취약계층,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또 한의약 접근에 있어서 취약한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노력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료형평성이나 의료공공성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의·한의 다 시민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AI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여러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한의약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궁금증이라든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데 필요한…… 이용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 다 공공데이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잘못된 사업입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26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산인데 추정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어쨌든 한의약계에서 임상데이터에 기반한 근거창출도 필요하고 이 예산은 누차 요구가 됐던 부분인데 그간 놓쳤던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것은 이수진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이수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담아서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이것은 반대라기보다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소위원장 서영석** 대신에 이 사업의 필요성들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23쪽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입니다.

보험정책사업관리 관련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과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24쪽입니다.

집행 가능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추경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하 25쪽까지 규모를 달리하는 세 가지 감액 의견이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전산인프라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것은 동일합니다.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적기에 전산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34억 5500만 원 감액 의견은 여기에 더해 민원대응 지원에서 전년도 미집행 사례를 고려해서 5억 3300만 원 추가 감액하자는 것이고, 33억 8500만 원 감액 의견은 민원대응 지원에서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4억 6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6쪽입니다.

26쪽은 비목을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전산인프라 구축 예산 29억 2200만 원 중에 11억 52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인 민원대응 지원으로 비목을 변경하고 예산 규모는 정부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민원대응 지원에서는 전년 대비 민원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서 상담인력을 443명으로 늘리고 중도사직 방지 등을 위해서 인건비 수준을 상향하기 위해 11억 52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이고, 전산인프라 구축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스토리지 확보, 기존 건보공단 이 보유한 AI시스템 활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부대장비 구매 등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11억 5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은 유지 의견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대상, 즉 소득하위 70% 여부 등 국민 민원 상담을 수행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인프라 구축 비용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 사업은 국민의 90%가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국민의 70%로 지원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안상훈 위원 작년에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도 당선턱 추경으로 소비쿠폰 1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민원대응 20억, 전산인프라 29억 이래 가지고 주셨는데요.

민원대응은 기존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런데 전산인프라 29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보에 확인해 본 바로는 시간 내에 이 돈을 못 쓸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이참에 이것 하고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소비쿠폰 계속할 거니까 미리 준비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면 이것은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다른 의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저도 안상훈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AI GPU 발주-납품-설치에만 최소 7개월 이상 걸리는데 맞지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기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 집행이 됩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뭐를 본예산에?

○김미애 위원 29억을. 집행도 안 되는 것을 왜 이걸 추경에 편성하냐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29억 등은 추경이기 때문에 신속히 지급해야 되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김미애 위원 뭐가 아니에요, 29억 2000 중에? 전산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7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스토리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신속한 절차로……

○김미애 위원 그러면 그 일부만 하면 되지요, 거기에 맞춰서.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이수진 위원 차관님, 이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인건비 더 추가는 비목 바꿔서 쓰시고.

그다음에 AI 서비스 구축은 실제로 오래 걸리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이수진 위원 스토리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스토리지 확보에 14억 7000만 원 정도……

○이수진 위원 그거는 바로 확보가 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 부분은 약간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조금 더 비목 변경하시고 스토리지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장님, 의견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말씀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민생 상담에……

민원 상담이라는 게 사실 자기 보험료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상당한 문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6쪽에 서영석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대로 인건비를 일부 증액하고 전산인프라를 감액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볼게요.

25년도에 민원대응 지원 예산 19억 9200 중에 7억 3800만 원, 약 37%가 불용되었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김미애 위원** 그런데 26년 추경안에 거의 같은 규모로 재편성됐는데 이거 맞아요? 또 다시 비목을 바꿔서 그대로 하겠다? 안 맞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할 때에는 지금 기준이 소득하위 90%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이 한 93만 건 발생했는데, 올해는 지금 기준이 하위 70%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민원이 2배 정도는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응이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다는 것 하나.

그리고 작년에 불용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왔던 분들이 중간에 나간다가 아니면 채용이 좀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비목 변경 안을 주신 위원님들의 것처럼 인건비를 살짝 올려서 적용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원활하게 인건비 부분은 해소하면서 민원대응은 더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정말 무책임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민원대응 예산 일부 삭감을 주장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철회할 테니까 그대로 하고 전산인프라 관련한 29억 예산, 이것 삭감은 수용해야 맞아요.

○**소위원장 서영석**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대응 지원은 20억에서 11억 정도를 더 증액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그래서 상담 인력을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밑에는 지금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노트북 준비하는 예산 2억 8000이 필요하고 앞에 스토리지 확보를 하는 데 14억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26쪽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저희가 인건비 예산 관련해서 방금 설명하신 걸 들어 보니 중도에 사직한 이유가 월 216만 원밖에 안 주고 그리고 전화 상담하면 컴플레인 하시는 국민들이 대다수였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인건비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은 거였잖아요. 업무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깐 실제로 이직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 다 못 쓰고 불용이 된 거잖아요, 중도 사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비용을 월 26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인건비를 올리면 그러면 좀 사직이 줄어들고 충분히 그 인원을 뽑아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63만 원은 건보공단에서 유사한 기간제 인건비 수준입니다. 소득 전산 담당자들하고 유사한 수준이라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그 정도 하면 인력 채용은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걸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미애 위원 지난해 민원대응에 문제 있었어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권병기 지난해에도 전체 민원은 약 93만 건 정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다양한 민원들이……

○김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가 대응에 미숙하다는 불만이 증가하거나 민원이 남아 있었냐고요, 적시에 해소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93만 건의 민원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지금 90%……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부 감액을 철회하고 작년에 5억 3000의 불용액이 있지만 그대로 편성하고 29억 원은 삭감하라는 건데 그걸 그대로 고수를 합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고수하기보다는 저희는 지금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그런 비목 변경안이 있으니까 그 대안도 저희들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입장입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이걸 수용 못 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아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게 294명으로 했는데 민원이 배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니까 그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단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 29억을 비목 변경해서 인원을 좀 늘려서 현실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끔 해 달라, 그게 443명이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지금 김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AI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29억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민원대응 인원을 좀 늘리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전진숙 위원 저도 한마디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서영석 예,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 실제로 전산인프라 관련해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예산만 저는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다 예산을 세워서 또 불용 처리하거나 이월하거나 이런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렇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 비용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14억 7000만 원에 부대장비 구입비 하면 2억 8200만 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전진숙 위원 저는 그것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와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처음에 기본으로 잡았던 민원대응팀의 숫자가 올해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권병기** 저희들 숫자는 294명입니다.

○**전진숙 위원** 294명입니까? 전산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응하는 기존의 294명에 플러스알파가 되면…… 이게 2개가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94명을 제안하셨을 때는 294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 증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산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여기서 소요가 돼서 오히려 민원대응 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는데,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2개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동의가 안 되는 거고.

저는 한 가지 다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216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전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잡아 놓으신 예산에도 216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놓으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런데 실은 최저 인건비 가지고 생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중도에 탈락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생활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알파를 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광주가 270만 2370원이고요 대구가 242만 3146원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생활임금 정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평균치가 있어요. 저는 최소한 인건비를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정리를 다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의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조금 올려 주고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좀 복잡해지고.

○**전진숙 위원** 아니,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소위원장 서영석**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생활임금제를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 내에서 유사 기간제근로자가 263만 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편성해서, 책정해서 하는 것이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 편성에 더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것만 정리를 하시지요, 294명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443명으로 늘려야 되느냐. 적정한 수를 제시할 수가 있나요?

○**이수진 위원** 차관님, 지난번에 1인당 100건 이상을 소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이수진 위원 그러면서 어려움이 발생했고 이직이 발생했고 이번에는 같은 일을 반복 해선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이수진 위원 제가 예전에 국정감사 전에 콜센터를 몇 군데 방문해서 콜센터에서 그 직원들이 어떻게 콜을 받고 응대를 하는지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인력 한 사람당 몇 건의 콜을 소화하고 또 응대해야 되는 민원인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역은 상당히 많은 걸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내용 숙지를 잘하고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잘못해서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불신과 오해가 생기고 또 다툼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그분들이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콜수를 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력이 그때의 실수라든지 그때의 어려움을 보고 조금 더 잡으신 거예요, 이번에는 그 건수가 더 많을 것을 예상해서.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그 숫자 가지고 그 건수를 다 포괄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주셔야지요. 생활임금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콜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업무량에 대한 분석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작년 지원 대상자는 소득하위 90%였는데 이번에 하게 되는 것들은 소득하위 70%입니다. 그러면 상위 10%는 민원 내지 문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70%, 80%, 90% 정도 구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90% 할 때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민원을 내고 상담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70%로 낮춰진 상태에서는 그런 민원 상담, 자기 보험료에 대한 그런 것과 또 소득수준에 대한 문의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고요. 그게 한 2배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간 중도사직 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용한 부분은 있지만 그만큼 또 업무 강도는 높았을 겁니다, 계속 수행하시는 분들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인원을 늘리면서 유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준으로 높인다면 민원대응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 조금 더 보완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 종사했던 분들이 근무기간 동안 평균 314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휴일근무 빼고 하면 평균 40일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78.5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사업은 기준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그걸 미처 추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비목 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인원을 433명으로 규모를 더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안상훈 위원님.

○안상훈 위원 작년에는 총인원 몇 명이었나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권병기 총인원이라 하면 지원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상훈 위원 아니, 상담 인력.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권병기 상담 인력이 294명이었는데 30명을 미썰 했기 때문에 26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안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 원래 원안에서 복지부에서 한 것은 그냥 작년 기준으로 업무량이 2배로 많아질 것을 생각을 못 하고 하신 거네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권병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충분히 논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긴 것 같고 AI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해서 비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정책국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건강정책국 소관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활한 대체인력 채용과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9억 7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증액 제기를 수용하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산업정책국.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오송 국제 뷰티아카데미 교육설비 구축—신규입니다—사업은 오송 국제 K-뷰티스쿨이 2026년 하반기 개원을 앞둔 국책사업임에도 공사비 이외에 지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교육설비 구입, 청년 창업 보육 및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하여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2026년 하반기 오송 K-뷰티아카데미 개원·운영 준비를 위해 교육설비 구입 및 교육콘텐츠 개발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납득은 잘 안 되네요. 애초에 이것을 몰랐던 건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저희들이 26년도 예산안에 넣어서 요구는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안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예.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작년에 인테리어 예산만 반영이 되고 교육설비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기재부를 설득할 자신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부대의견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대의견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정리한 부대의견을 바탕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측에서 먼저 정리된 것을 순서대로 얘기를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맨 처음에 의료급여입니다.

네 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4개를 다 합쳐서, ‘복지부는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과학적 추계모델 도입 및 지속적 미지급금 발생 해소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님들 모두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긴급복지는 이수진 위원님 한 분이셔서 원안 수용 입장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번의 그냥드림 관련해서는 자료가 아마 배포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수용……

○**김미애 위원** 읽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읽을까요, 위원님?

‘복지부는 민간 후원 조달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거동불편 노인 등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송·방문형 지원, 읍면동 및 기존 복지서비스 연계, 전담인력 배치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신선식품, 저염식, 당 조절식, 연하식 등 건강상태를 반영한 품목 기준과 국가책임에 기반한 최소 필수 물량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별 편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복지관, 푸드뱅크 등 지역복지 인프라와 기능 중복 여부 및 민간사회복지 자원육성지원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두 분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김예지 위원님, 잘 반영됐지요?

○**김예지 위원** 예.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다섯 번째, 청년미래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수정이 됐는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복지부는 연내 전국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하고 지방비 매칭 주기적 점검 등 사업관리를 면밀히 수행하며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세 분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고요.

김선민 위원님 부대조건은 ‘복지부는 위기아동·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포괄적 돌봄 관계를 인정하는 방안과 시범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관련입니다. 네 분 위원님이 주셨고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보조인력으로 고용하는 청년 629명이 충실한 실무 경험을 쌓고 채용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다. 또한 채용 단계에서 관련 분야 취업 희망자, 자격증 소지자 및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를 우선 선발한다’.

두 번째는 ‘복지부는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혹은 업무평가 등 8개월간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과 우수 인력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마련한다’.

○**김예지 위원** 반영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김상훈 위원……

안상훈 위원님.

○**안상훈 위원** 갑자기 성을 바꾸시면……

(웃음소리)

○**소위원장 서영석** 김예지 위원님이 얘기해 가지고……

○**안상훈 위원** ‘채용 단계에서 관련 분야 취업 희망자’ 이렇게 넣으면 사실 이것 다 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빼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

위원님, 그런데 사실 희망자가 있기는, 하기는 해야 되는……

○**안상훈 위원** 왜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희망하는 사람 선발……

○**안상훈 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당연히 희망자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알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그런데 자격증이 없거나 취약계층도 아닌데 희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그러면 취업 희망자를 삭제하고요 ‘채용 단계에서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소위원장 서영석** 부담은 없을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우선 선발이기 때문이에요……

○**김미애 위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우선 선발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저희가 자립지원기관은, 사실 채용 조건을 줄 때……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것 쉽표로 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상관없을 듯합니다. 그렇게 수정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앤드(and)가 아니고 오어(or)다 이거지요. ‘자격증 소지자나 자립준비청년 등’ 이런 거지요?

○**김미애 위원** 그냥 쉽표 하면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맞을 쉽표로 고치시라는 말씀……

○**김미애 위원** 자격증 소지자 쉽표, 맞을 삭제하고.

○**소위원장 서영석** 정리하겠습니다. ‘채용 단계에서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를 우선 선발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19번,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서미화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원가정 복귀자를 포함한 색동원 입소장애인 전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활동지원 추가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주택 확보 등 가용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및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안내에 관련 지침을 반영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21쪽, 부대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안은 원안 수용하고 김윤 위원님 안도 원안 수용합니다. 서영석 위원님의 부대의견과 장종태 위원님의 부대의견은 유사한 취지가 있어서 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니어 의사 상시 채용이 가능토록 사업을 개선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수요 등에 기반한 유형별 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한다’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8쪽,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수진 위원님, 김윤 위원님, 서영석·이주영 위원님 안을 반영해서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등 지역 보건진료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근무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협의 등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 체계 개편, 통합돌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통합적 일차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서 좀 다듬었는데요. 부대의견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소모품 등)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생산업체 지원 및 유통 물류 안정화 방안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서영석 고생했습니다.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제가 오전에 28번 질의할 때 장관님께서 '상반기 중에 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했는데 부대의견을 복지부에서 정리해 오신 안에는 '상반기'가 빠져 있어서…… 그런데 하반기에 일차의료 체계 시범사업 하실 예정이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김윤 위원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하반기에 시범사업 하시려면 상반기에는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여기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런 취지로 해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너무 그러지 맙시다.

○김윤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더 의견 주실 것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부분은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스란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계수조정과 부대의견 문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미애 김예지 김 윤 서명옥 서미화 서영석 안상훈 이수진 이주영 장종태
전진숙

○청가 위원(2인)

김남희 윤호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신은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제2차관 이형훈

장애인정책국장 차전경

건강보험정책국장 권병기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복지정책관 배경택

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

노인정책관 임을기

사회서비스정책관 유주현

공공보건정책관 이중규

한의학정책관 방석배

필수의료지원관 고희우

입시회의록